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북 지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1.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10. 6.

다. 상정일자: 2021. 10. 18.

(제262회 임시회 개최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구청장 및 공기업 등의 장이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규정(안 제5조)

라.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6조)

마.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7조)

바. 충전시설 설치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협조부서: 맑은환경과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라. 입법예고(2021. 9. 2.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 개선 및 성동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7.)에 따르면
 -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으로
 - 특히, 수송분야를 보면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
 - 먼저,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여 교통 수요 관리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 이처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발표함.

-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적 · 경제적 · 산업적 측면 등 다양한 이점에 따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 세계 각국은 전기차 보급목표 설정,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축, 전기차 생산 확대 및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 전 세계 전기차 신규 보급대수('17년 기준)는 114.9만대로 전년(74.4만대)대비 약 5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중국과 미국이 각각 약 58만대, 20만대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은 누적기준 및 '17년 보급 기준 모두 세계 1위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국가별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급현황〉

(단위: 천대)

순위	국가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합계	
		2017신규	누적	2017신규	누적	2017신규	누적
1	중국	468	951	111	277	579	1,228
2	미국	104	402	94	361	198	763
3	일본	18	104	36	101	54	205
4	노르웨이	33	116	29	60	62	176
5	영국	14	45	34	89	48	134
6	네델란드	9	21	2	98	11	119
7	프랑스	26	92	9	26	35	118
8	독일	25	59	30	50	55	109
9	스웨덴	4	12	16	37	20	49
10	캐나다	9	24	8	22	17	46
계		750	1,928	398	1,181	1,149	3,109

※ 출처: IEA, World EV outlook 2018

○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¹⁾”에 따르면

- 친환경차를 25년까지 283만대, 30년까지 785만대 보급하고
자동차 온실가스를 30년까지 24% 감축

1) 3차 기본계획 기간('16~'20) 중 친환경차 보급·수출 지속 증가하였음

* 누적보급('16→'20년) : 24만대 → 82만대(3.6배) / 수출('16→'20년) : 7.8만대 → 28만대(3.5배)

* '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기록

○ 그러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 가속화의 걸림돌임

○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연평균 28%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차 시장

('25년 年 2,800만대)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 내연기관차와 동등수준의 전기차 · 수소차 성능 확보
- 그린수소·메탄 등 탄소중립 시대를 개척하는 미래기술 개발
-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전환
-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유망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지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9.2%(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를 '25년까지 27만대를 보급하여 전기차 시대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²⁾

전기차 보급 목표(연도별, 차종별)

(단위 : 대)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 체	270,000	31,029	22,980	27,000	40,000	59,000	90,000
승 용	175,275	20,450	14,370	15,040	23,175	39,240	63,000
택 시	10,000	1,022	630	2,000	2,048	2,100	2,200
버 스 (마을버스 포함)	3,523	314	412	560	777	660	800
화 물	19,050	2,050	2,600	2,400	4,000	4,000	4,000
이 룬 (배달용 포함)	62,161	7,193	4,968	7,000	10,000	13,000	20,000

전기차 충전기 보급 목표

(단위: 기)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 체	200,000	8,387	12,000	34,763	37,650	50,800	56,400
급 속	5,000	1,232	497	621	850	700	1,100
완 속*	195,000	7,155	11,503	34,142	36,800	50,100	55,300

*완속충전기는 콘센트형 충전기 등을 포함한 수치임

2) 2021. 8. 30. 서울시 보도자료

전기차 충전기 종류

종 류		사진(예시)	설치면적	공급전력	충전소요시간
초급속 충전기			약 20 m ²	250kW ~ 300kW	10~20분
급 속 충전기			약 1.5 m ²	40kW ~ 100kW	30~60분
완 속 충 전 기	스 탠 드 형		약 0.1 m ²	7kW	5~6시간
	벽 부 형		없음 (벽 또는 기둥에 부착)		
콘센트형 충전기			없음 (기존 콘센트 사용)	3kW	10~14시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주차요금 감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

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주차장법」 제6조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지정, 요금감면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³⁾에 관련 규정을 적시하였음.

○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12개의 자치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제명으로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 “전기자동차” 제명으로는 서울의 4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는 4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⁴⁾ (2021. 9. 25. 기준)

3) 제6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2.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제30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로 검색

○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기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실태 및 불편사항”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구입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41.7%), 느린 충전속도(19%), 비싼 차량가격(17.4%)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서울시 자치구별 전기차 및 충전기 설치현황을 보면, 성동구는 전기차 941대(7위)이며 강남구가 7,696대(1위), 종로구가 313대 급속충전기는 63기(5위)이며 강남구가 104기(1위), 강북구 16기 완속충전기는 239기(17위)이며 서초구가 599기(1위), 강북구 133기로 발표⁵⁾된 것처럼 우리 구는 전기차 보유는 상위권이나 충전기 설치는 16위로 충전기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⁶⁾

5) 2021.6.3. 내일신문 기사 (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공했고 2021년 4월말 기준이며 자치구 직접 설치 충전기는 미포함입니다)

6)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시행일 : 2022. 1. 28.]

○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2022.1.28. 시행)에서 경감하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도 향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충전시설 설치 등 상존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